"이사 충실의무에 주주 비례적이익 추가, 소액주주 보호를"

이용우 의원, 상법개정안 통과 촉구
기업 물적분할 발표 후 주가약세
소액주주 중심 반발의견 커져
금융당국도 권익제고 방안 발표
시민단체, 1894명 서명서 전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야 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3월 상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규정해, 부당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의 준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상장기업들이 물적분할을 발표한 뒤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반발의 견이 커졌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흥행몰이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LG화학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소액주주 가치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최근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응 방안에는 일반주주 보호 노력에 대한 심사 강화,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소액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물적분할 상장 보완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앞선 대선 과정에서도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일정한 합의가 있었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여러 민간단체에서 개정안 촉구를 요구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대주주만이 자신의 지분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합병비율을 시가로 결정해 합병비율을 왜곡하는 등 한국에서만 허용되는 주주권리 침해 행위를 막아야한다"며 "이제는 상장사 전체에서 창업자 가문의 내부 지분율이 3.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국민이 보유한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이슈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오후에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상법 개정 캠페인을 통해 모은 1894명의 개정 촉구 서명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물적분할 등 '쪼개기 상장'은 자본시장 구축에 걸림돌이 되면서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한국 주식시장은 물적분할 트라우마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15조 투입 청주에 M15X 건립

내달 착공 확정… 2025년 완공 목표
6만㎡ 복층구조, M11·M12 합친 규모

SK하이닉스가 돌아올 '슈퍼 사이클'을 대비해 또다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다.

SK하이닉스는 다음달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M15X 착공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M15X는 당초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겼다. 완공은 2025년초를 목표로 5년여간 1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규모는 약 6만㎡에 복층 구조로, 청주 M11과 M12를 합친 규모로 만들어진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위기 속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온 바 있다. 2012년 처음 SK그룹에 편입될 당시 투자를 10% 늘리며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치킨 게임'과 시장 침체 등 우려 속에서도 이천 M14, 청주 M15, 이천 M16 등을 새로 준공하며 2015년 발표한 '미래비전'을 완수해냈다. 이를 통해 D램뿐 아니라 낸드 사업을 강화하고 메모리 반도체 2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생산시설 단지도.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이번 투자도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어날 때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메모리 업황이 2024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2025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발빠른 증설을 통해 공급량 확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투자를 보류했던 인근 M17 신규 공장은 추가로 반도체 시황 등 경영환경을 고려해 착공 시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은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다가올 10년을 대비해야 하며, M15X 착공은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부천 대장~홍대입구 철도 민자사업 지정

부산 감전동~송정동 지하도 민자 추진
정부, 내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 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지정됐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 구간에 지하도로를 놓는 사업도 민간투자로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초 이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장~홍대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론 처음 혼합형 사업방식을 적용해 추진된다.

혼합형 사업방식은 고위험·고수익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저위험·저수익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절충한 방식이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민간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사업비는 총 1조7988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3기 대장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부산 사상~해운대 대심도 지하도로 건립 사업도 의결했다. 이 또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부산 시내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되고, 부산 동서 지역 간 이동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무역수지 악화 대부분은 수입단가 상승 탓

한은,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중국 수출둔화 영향도 일부 작용
연간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할 듯

최근 무역수지 악화는 대부분 수입단가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무역적자 지속에도 무통관수출 증가, 본원소득수지 흑자 등으로 경상수지가 연간으로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지속가능성 점검'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적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무역수지 변동에 대한 기여도를 수출입 단가 및 물량으로 분해하면, 최근 무역수지 악화는 대부분 수입단가 상승에 기인했다. 중국 경기부진 등에 따른 수출물량 둔화도 일부 작용했다.

1~8월중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454억달러 감소했는데, 이 중 단가요인으로 472억달러 감소하고 물량요인으로는 18억달러 개선됐다.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정도(-867억달러)가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폭(+395억달러)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수출물량의 무역수지 개선효과(+165억달러)도 작년(+372억달러)에 비해 감소했다.

품목·지역별로는 에너지·석유제품(정유)의 단가요인(-353억달러)이 올해 무역수지 감소폭(-454억달러)의 78%에 해당했다. 지역별로는 대(對) 석유수출기구(OPEC)는 단가요인으로, 對중국은 물량요인(수출 둔화, 수입 확대)으로 악화된 모습이다.

과거 무역흑자에 크게 기여했던 휴대폰·디스플레이·선박·자동차 수출은 상당 기간 둔화 흐름을 지속하면서 과거 고유가시기(2011~2013년)와 달리 에너지·광물부문에서의 적자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업계 "IRA 법 자체 바뀔 가능성 낮아"

›› 1면 'IRA 대응책 못찾은'서 계속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도 IRA 시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정 회장 출국 후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에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으로 떠났다. 국내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포함 시켜주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지 의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 서명하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응했다면 어느정도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어렵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IRA를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사태의 조기 해결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IRA 법인만큼 추후 세부 조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큰 틀에서 법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며 "한미간 협의 채널을 통한 법 개정 노력과 우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